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적정 국방예산



羅 基 山 / 국방대학원 교수
정책학 박사

66

군사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군사비나 경제개발 투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비를 포함한 국가재정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쓰여졌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은 기술집약적 방위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게끔 하는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국방비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2가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바, 군인과 국방관련기관들은 적의 전력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적·물적자원을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려 합니다.

반면 산업계 등 국방부문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非군사부문에 보다 많이 투입하려 합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비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는 군사비의 증가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중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선진국에서는 군사비의 증가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군사비나 경제개발투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비를 포함한 국가재정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쓰여졌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국방연구개발비가 민간경제에 파급효과를 주었던 70년대에는 높은 국방비하에서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나 70년대 중반이후 복지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국방비 규모와 관련된 주장들의 설득력의 강도가 강한 것들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비의 감축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군사적 역량의 축소와 연결되어져야 한다.

* 한반도 주변국들(특히 일본과 중국)이 경제력을 키워가는 한편으로 군사대국화를 피하는 가운데, 한국만이 대안없는 감군과 군비축소를 서두를 경우, 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존 투자액의 효율적 및 지속적 사용을 오히려 저해하며, 나아가 자칫 구한말의 상황이 재편되게끔 할수 있다.

* 우리나라로 이전의 높은 국방비 부담에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따라서 군사비의 삭감보다는 경제분야에서의 합리적·효율적 정책이 더 요구된다.

* 군사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병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무기중심의 기술집약적 방위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영국의 경우 3년이 걸림)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 생산적 인력확보를 위해서 국방인력의 감축보다는 서비스 산업으로의 인력 이동억제, 유휴인력의 고용 등 완전고용에 대한 검토가 더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미·소 화해와 독립국가연합(구소련) 및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군사적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반면, 경제적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군사력보다는 경제성장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 국방비 삭감으로 인한 여유 자본을 경제분야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투입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막강한 경제력과 높은 기술수준은 장기적으로 군사비 부담능력을 증대시켜줄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약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북한 군사력의 규모나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적화통일노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병력집약적 방위가 가장 경제적 또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다.

*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100만 대군의 주력을 휴전선 가까이에 전진 배치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전략가들은 병력과 무기의 수가 우위에 있을 때 남한을 공격하자고 건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더욱 위험한 시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 장래의 세계질서는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다극체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냉전 이후의 체제 또는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으며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오히려 냉전시대 보다 더 높다라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방비 삭감을 지지하는 논점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안보의 위협에서 군사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 국방비의 절감은 경제력 및 기술수준의 제고를, 그리고 이는 군사비 부담능력을 제고 시킬 것이다.

둘째, 국방비 절감의 저해요인 및 조건사항으로 연결되는 논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 국방비의 감축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군사적 역량의 축소와 연결되어져야 한다.

셋째, 다음은 국방비 삭감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의 약점을 짚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이전의 높은 국방비 부담하에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따라서, 군사비의 삭감보다는 경제분야에서의 합리적, 효율적 정책이 더 요구된다.

넷째, 다음은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병력집약적 방법이 가장 경제적 또는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

* 군사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병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무기중심의 기술 집약적 방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이 강하다.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은 기술집약적 방위에 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게끔 하는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집약적 방위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의 발전보완과 제도적 개편 및 청사진(세부정책)을 정립하고, 기술집약적 방위를 이루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